野 "방송 장악" vs 與 "정치 공세"… 이동관 놓고 정면 충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파장…野 지명 철회 요구에 與 총력 엄호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지난 31일 여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총력 엄호에 나선 반면 야당은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등 전선이 격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인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사가 더 이상 망사(亡事)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 증거가 쏟아졌다. 학생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자녀 전학이 결정됐다는 (이 후보자) 해명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방통위원장은커녕 공직자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부족하다.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오히려 청문회를 더 잘 준비해서 문제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여당과 이 후보자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총력 엄호'에 나섰다.

원내 지도부와 방통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언론장악용 인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언론 탄압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학부모 갑질과 방송 장악이라는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하지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며 "자녀 학폭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고, 방송 장악은 민주당의 전공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공영 방송마저 중립 방송으로 제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 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통위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인 윤두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혹독하고 무자비하게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언론인을 탄압했던 민주당 정권이 이 후보자를 두고 언론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억지를 부린다"며 "방송 정상화가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비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후보자는 지식과 경험, 인간관계와 네트워킹, 리더십과 추진력 등 삼박자를 갖춘 인물"이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동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 "이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구체적으로 (언론 장악이) 시행된 게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10월 사퇴설' 일축

친명계 "실현 가능성 없어"…후임 거론 김두관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친명(친 이재명)계는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으며, 이 대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지난 31일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10월 사퇴하고, 이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김 의원을 후임 당 대표로 밀 것이라는 설이 돌았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8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8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지상 과제로 줄기차게 언급해 온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모종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이번 소문과 맞닿아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친명계는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 사퇴설'과 관련한 질문에 웃으며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 후임으로 거론됐던 김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사법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충분하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어 10월 전당대회라는 게 가정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거론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엔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이 호남과 수도권 승리만으로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1당이 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만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경남 양산 을이 지역구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하고 이 대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민주당 내부의 유동성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빠진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 교체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尹 정부, 한전공대 정치 탄압 중단해야"

민주당 의원 95명 회견…"총장 해임 건의 철회·출연금 추진을"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95명은 지난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전에너지공과대학 총장 해임 건의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감사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하고, 정부와 한국전력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3명과 무소속 윤관석 김남국 의원 등 총 9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감사원의 무리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공대 부실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며 "총장 교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대 운영을 무력화하고,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저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년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할 미래 세대의 교육과 산업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드는 건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협하는 자해 행위"라며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상적 재정지원과 안정적 대학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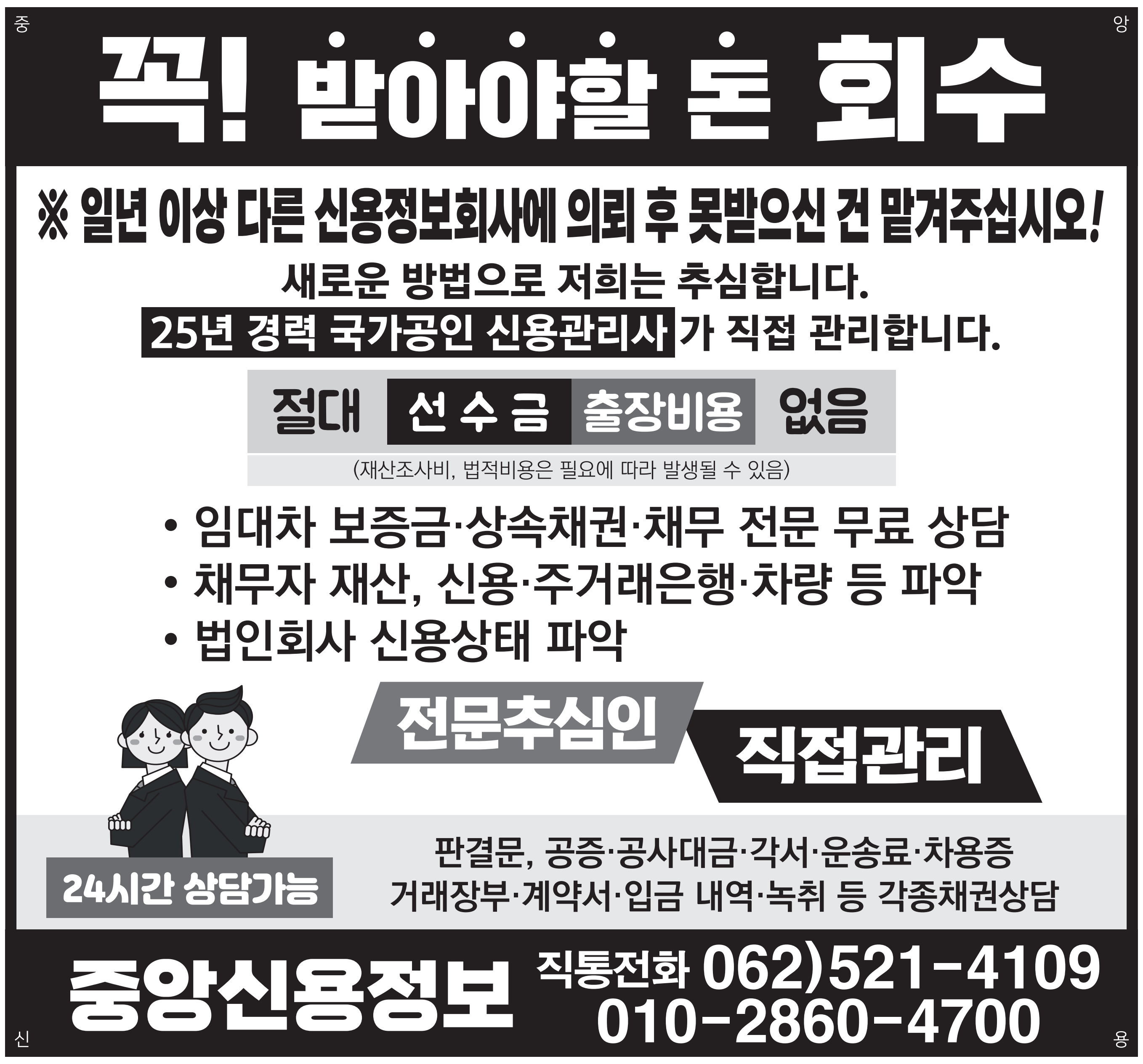
지방정가 라운지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민주당 입당

29년 공직 마무리…내년 총선 출마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31일 "올바른 정치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문 전 부지사는 이날 민주당 입당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29년 간 공직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 소통하는 정치인, 초심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5가지 약속을 지키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올바른 정치란 행동하는 양심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기득권의 카르텔을 혁파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으로 누구에게도 빚이 없는 떳떳함으로 당당히 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부지사는 "수도권 집중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나아가려면 사회적 난제를 지역 현장에서 해결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만이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일 것"이라며 "전남도와 시·군을 도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